

“韓 회계투명성 20위권 진입 목표 감사품질 지키는 선에서 경쟁해야”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인터뷰 | 최 운 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회계투명성을 20위권 안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한공회에서 메트로경제와 만나 오는 17일 서울에서 개막하는 세계회계사대회(WCOA)에서 한국의 회계개혁 경험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1904년 시작된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까지 사흘간 해외 대표단 800여 명을 비롯한 국내외 회계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과 지속가능성 공시 등 업계 현안을 논의한다.

최 회장은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면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회계투명성은 올해 70개국 중 55위에 머물렀다. 그는 기업이 감사인을 직접 고르는 시장에서도 회계사가 경영진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저가 수임 경쟁이 감사시간과 절차를 줄이는 데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20위권 들어오면 유지할 명분 없어” …지정제 만든 회장의 조건

최 회장이 외감법 개정 당시 주목한 건 감사 계약을 갱신하는 순간이었다. 회계처리를 두고 경영진과 이견이 생겼을 때 이듬해 계약을 잃을 수 있다면 감사인이 소신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감사인 선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기업에선 그 압력이 더 크다고 봤다. 상장사 등 적용 대상 기업이 일정 기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뒤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이런 문제에서 출발했다.

내일 ‘세계회계사대회’ 첫 한국 개최
감사인 지정제 도입으로 독립성↑
올해 韓 회계투명성, 70개국 중 55위

감사품질 저하 우려되는 사례 대해
금감원 감리 필요성 검토 요청 추진

그는 “미국에선 필요한 감사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회계사 스스로 계약을 거절하고, 부실감사가 드러나면 투자자가 책임을 묻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를 경제 규모에 걸맞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20위권 안으로 들어오면 사실 이걸 유지해야 될 명분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회계투명성 평가에서 한국은 한때 37위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70개국 중 55위에 그쳤다. 지정 기간을 마친 기업이 감사인을 다시 고르는 시장에선 회계법인 간 저가 수임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최 회장은 보수를 낮춰 계약을 따낸 뒤 그에 맞춰 감사시간과 절차까지 줄이면 투자자가 믿고 볼 재무정보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대형 회계법인 대표들을 만나 감사품질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경쟁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공회는 감사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사례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감리 필요성 검토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회장은 기업에도 감사에 들이는 돈을 기업가치를 높이는 투자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재무정보를 믿을 수 있어야 투자자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민간위탁 14조6000억원…“어떻게 쓰였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지난 6월 연임한 최 회장이 두 번째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회계기본법 제정이다. 여러 법률과 부처에 흩어진 회계처리·감사·공시·감독의 기본 원칙을 세우자는 구상이다. 같은 법인에 관할 부처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를 줄이고, 소규모 단체가 비슷한 자료를 여러 곳에 내는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봤다. 관련 법안은 여야에서 각각 발의됐다.

그가 회계 사각지대의 사례로 든 곳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이다. 지자체가 민간에 공공서비스 운영을 맡기고 예산을 지급하지만, 집행 내역을 외부 회계감사로 검증할지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최 회장은 사업 규모가 연간 14조6000억원에 이른다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회계감사를 세무사의 결산서 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회장은 지역에 따라 검증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법에 회계감사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봤다. 민간에 예산을 맡긴 뒤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일까지 위탁사업을 관리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설명이다.

◆ AI가 가져간 첫 일감…신입은 어디서 실무를 배우나

서울 대회에서 최 회장이 해외 회계업계의 경험을 듣고 싶다고 꼽은 분야는 AI다. 그는 미국 등 해외 회계업계가 AI 활용에서 앞서 있다며, 기술이 어디까지 회계사의 업무를 바꿀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내에선 투자 여력이 다른 대형 법인과 중소 법인 사이에 대응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최 회장은 중소 회계법인들이 개별 법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개발비를 나눠 AI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며 한공회도 개발과 보안 대응을 지원할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AI가 대신하기 시작한 자료 수집과 대조는 수습회계사가 처음 맡아온 일이기도 하다. 신입은 그 일을 하면서 기업의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감사인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배웠다. 반복 업무가 줄면 법인은 당장 신입을 덜 뽑을 수 있다. 몇 년 뒤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감사의견에 책임질 사람을 어떻게 기를지는 별개의 문제다. 최 회장은 회계법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입을 채용하고 육성해 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회계기본법 제정 최우선 과제 꼽아
지자체 민간위탁 ‘회계 사각지대’
年 14.6조 사업… 국민 알 권리 있어

서울대회서 해외업계 AI 경험 알고파
장기적 안목으로 신입 채용·육성해야

지속가능성 공시의 제3자 인증 등
재무제표 감사 넘어 시장 확장 전망

선발 규모도 실제 수습 수요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1150명이다. 한공회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진행한 연구에선 현시점의 적정 선발 규모가 900~1000명으로 제시됐다. 최 회장은 금융당국에 900~1100명처럼 범위를 정해 채용 여건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인터뷰 도중 그는 한 금융지주 회장과 나눈 대화를 꺼냈다. 이 회장은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를 행원으로 뽑아 장차 은행장 후보로 키우고 싶다고 했다. 기업의 숫자를 읽는 능력이 은행 경영에서도 경쟁력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자신도 시험에 합격한 뒤 학계와 금융정책 분야에서 일했다며 올해 합격증 수여식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반드시 회계감사만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 재무제표 밖으로 넓어지는 검증…기후·노동 전문가와 한 팀

최 회장이 회계사의 일이 넓어질 분야로 꼽은 것은 지속가능성 공시의 제3자 인증이다. 기업이 공개한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노동 관련 정보가 어떤 근거와 절차를 거쳐 산출됐는지 외부 전문가가 확인하는 일이다. 그는 해외 거래에서 이런 정보를 요구받는 국내 수출기업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봤다. 회계업계에는 재무제표 감사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시장으로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업이 공개하는 숫자의 근거를 따지려면 회계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최 회장은 회계법인이 인증을 주도하되 기후와 노동, 지배구조 전문가가 검증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회계사가 공시의 근거와 검증 절차를 살피고, 배출량 산정 방식처럼 분야별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전문가가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그는 기존 감사시장에도 성장 여지가 있다고 봤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외부 검증이 필요한 곳은 늘어나는 만큼, 회계법인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보수부터 깎기보다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우리 회계사들이 정말로 원칙을 지키면 감사시장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와 인터뷰를 가진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